

# ‘동물 안락사’ 본격 논란...“불가피했다” vs “기준 있었나”

‘케어’ 박소연 대표 “안락사 불가피, 논의 필요”  
 동물보호법 22조 수의사 판단 하 안락사 가능  
 활동가들 “안락사, 상식적인 수준에서 동의해”  
 “한국, 예산·공간부족에 따른 조치 다수” 비판  
 “명확한 기준과 함께 사회적 논의 시작 필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권단체 케어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호소에서 안락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공간 부족으로 안락사를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안락사는 원래의 삶을 지속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행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안락사는 대부분 ‘예산 부족’ 때문에 이뤄진다”며 “지자체 또한 결국 무한대로 동물들을 보호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현재 많은 사설 보호소의 경우에는 후원금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락사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임의로 동물을 죽였다는 것이 문제”라며 “동물학대 조항에는 ‘동물학대’라고 규정한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 임의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좀 더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한편 수의학적 목적 등으로 용인될 수 있는 안락사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꼭 보호소 동물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안락사가 더 인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기준 미련과 함께 안락사가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부터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동물의 안락사’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물권단체 ‘케어’에서 안락사가 벌어졌다는 내부 고발자 폭로가 계기다.  
 전문가들은 동물 안락사 허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안락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다.  
 15일 각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동물 안락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 다만 현행법은 안락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다루고 있는 법조항이 동물보호법이다. 이 법 제22조에선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의 경우 수의사가 회복 가능성과 질병의 전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인도적인 처리,

즉 안락사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동물 안락사 논란을 촉발한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면서 더 이상 동물을 받을 수 없는 민간 보호소들의 포화상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표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일찍 시작되고 활발했던 미국은 거의 모든 동물단체들이(SPCA, 휴메인소사이어티, PETA 등) 안락사를 하고 있다”며 “영국의 경우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는 단체들조차 결국 안락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스스로는 하지 않더라도 안락사 정책이 있는 다른 보호소로 보내 그곳에서 결국 안락사를 해 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동물권 활동가들 역시 안락사의 필요성에 일단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동물권 단체 활동가 A씨는 “(모든 활동가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활동가들 사이에) 안락사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안락사를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제한적인 조건 아래서 이뤄지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동물권 단체 활동가인 B씨도 “과거 동물권 단체에 들어갈 때

‘안락사에 동의하냐’고 물어 ‘그렇다’고 대답했다면서 “다만 이는 치료가 불가능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안락사를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들 활동가들은 보호소 운영 예산 공간 부족 등 경제적 이유로 행해지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의 안락사 지시를 최초 폭로한 케어 동물관리국장은 “안락사의 기준이 보호소 공간 부족이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어웨어 대표는 “동물의 안락사는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거나 통증이 심해 더 이상 반려동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인지 등을 확인하는 등 수의학적 판단하에 진행돼야 한다”며 “미국 보

## ‘안락사 논란’ 케어, 사료값 동날 판...“2분마다 후원취소”



동물들을 안락사시켜왔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 측에 후원 중단 전화 및 메일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은 케어 상근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기자

들과 만나 “정기후원이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도가 나온 후 주말 동안 2분에 1번꼴로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전화 혹은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료비만 매달

1400만원이 들어간다”며 “직원들 월급은 안 받을 수 있지만 동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데 걱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기준 케어 정기 후원자 규모는 5000여명이라고 김 변호

한 이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 대표는 이번주 내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며 “박 대표는 최초 보도에 자신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억울한 측면이 있고 기자회견을 통해 오해

케어 상근 변호사 “정기후원 끊기는 중”  
 “원만한 합의 위해 비대위 구성할 예정”  
 “박소연 대표, 억울 주장”...사퇴 의사無

사는 전했다. 개와 고양이 뿐만 아니라 말도 외부에 위탁해 관리 중이다.  
 김 변호사는 “직원과 박소연 대표의 원만한 합의와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최초 폭로자와 대표를 제외

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소연 대표는 이르면 16일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락사 논란은 이 단체 동물관리국장 A씨가 케어에서 보호하

던 동물들을 박 대표 지시로 무더기 안락사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 동물 23마리 이상이 안락사됐다며 박 대표가 비밀리에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 11일 케어의 사회관계서비스팀(SNS)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2011년 이후 안락사를 하지 않았으나 2015년경부터는 단체가 더 알려지면서 구조 요청이 더욱 쇠들었다”며 “심각한 현장들을 보고 적극적인 구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리고자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들은 극한 상황에서 여러 이유로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수의 동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 치료 등의 노력을 해 왔고 엄청난 병원치료비를 모두 감당한 후에도 결국 폐사되거나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케어에서는 소수의 동물들에 대해 안락사를 시행한 바 있고 결정과정은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 하에 동물병원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이상 동물을 받을 수 없는 이 과포화상태도 이런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일찍 시작되고 활발했던 미국은 거의 모든 동물단체들이(SPCA, 휴메인소사이어티, PETA 등) 안락사를 하고 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국내에도 이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지역공감, 미래성장, 전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